

경기도교육청, '민주적 학교공동체' 방안 모색
윤청신 기자 | powerman02@hanmail.net

승인 2012.10.19 07:23:57

모든 학교구성원이 주인되어 집단지성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공동책임을 지는 자치학교, 그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가 열린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강당에서 경기교육자치협의회(이하 '교자협') 및 참여협육추진위원회와 함께 <참여협육에 기초한 민주적 학교공동체 구현방안>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집단지성과 지혜로 운영되는 학교, 구성원 개개인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학교, 함께 정한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참여와 협육의 방법 등을 다양하게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수광 이우중 고등학교 교장이 주제발표하고, 송주명 한신대 교수,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 이충익 발곡고 교사, 이태의 교자협 지역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발제와 지정토론에 이은 자유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에는 방청석의 질의를 받거나, 학교교육공동체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수광 교장은 '민주적 학교공동체 구축의 전환 조건과 실행과제' 발제에서 민주적 학교공동체의 의미 범주, 자치학교(自治學校)로의 전환 조건, 학교자치를 위한 실행과제 발견 전략 3가지를 밝히고 상상 가능한 실행과제로 ▲학생권리 목록의 확장, ▲교사회의 결정권 확대, ▲학부모 참여의 제도화(학부모 주체화)를 제시했다.

교자협 부위원장인 경기도교육청 백성현 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민주적 학교공동체 구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런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 자체가 참여와 협육에 기초한 민주적 학교 운영의 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자협은 토론회 의견을 정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반영되도록 김상곤 교육감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조례'제정 2차 공청회
교육주체 참여·협육과 교육 공공성 기틀 마련
윤청신 기자 | powerman02@hanmail.net

승인 2012.06.12 12:44:26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2일 오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부모회 조례 제정 2차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도립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교육가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공청회에는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 약 5백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협육추진위원회 이광호 위원이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 방향'을 발표하고,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전문직 대표, 시민단체 대표, 법률전문가 대표 등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했다.

조례는 학부모의 교육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한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학부모의 공공적 책임과 권한을 학부모회로 실현하고,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며, 교육주체들이 함께 소통하는 교육문화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학부모의 역할을 수요자에서 프로슈머로 전환하기 위해 실정법으로 명문화한 조례가 필요하며,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주체의 자율적 참여와 협육으로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공청회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학부모회 조례는 전국 최초”라며 “교육주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유명무실했던 학부모회가 교육 발전의 공적 주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학부모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시대의 추세에 발맞추어 혁신적 교육의 변화를 예고하는 조례로 평가되어,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너“조례 제정으로 민주적인 교육 풍토가 조성되고, 학교현장에서 교권·학생인권·학부모 권리가 상호 존중되면서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회 조례가 순조롭게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례제정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경기교육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반기에 조례안을 확정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학부모회 조례 제정 추진...‘참여협육의 공공성 확보 기틀 마련’

광명시민신문 승인 2011.11.16. 20:14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학부모회 권한과 공공적 책임성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6일 오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회 조례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회 조례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에 대해 경기교육가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장 김장중 박사가 ‘학부모회 설치 조례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고, 교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하였다.

공청회에서는 또한 여주 상품초등학교의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상품초는 지난 10월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공모의 학교교육참여 분야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장중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것에 비해, 학부모회의 목적과 사업 및 그 활동 범위와 방법 등이 분명하지 않다. 특히, 학부모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관련 법규가 없어 목적과 활동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나오고, 학교공동체 내에서 역할과 위상과 관련한 갈등도 노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또 “과거의 학부모회 모습을 탈피하고 이제는 훌쩍 자라서 어엿하게 제 역할을 하는 학부모회를 위해서는 몸에 맞는 새 옷이 필요하다.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김 박사는 ▲조례 제정의 가능성과 예상 효과, ▲조례 제정의 내용적, 형식적 방향, ▲조례에 포함될 사항, ▲조례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학부모회 조례 제정은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한과 공공적 책임 대변, ▲배움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진정한 교육 문화 실현,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향상 등을 취지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손일선 사무관은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가 학교현장에서 보다 바람직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교육의 변화를 예고하는 만큼,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내실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전국 최초의 조례에 걸맞는 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교육가족, 전문가,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 경기도민과 함께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이다.